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35.93 (-48.50)	684.36 (-13.2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603 (+0.067)	1450.65 (+15.15)



“해외 투기자본 악용할 것” vs “소액주주 보호 필요”

〈재계 측〉

〈투자자 측〉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추진 재계 “고소·고발 늘어 리스크↑” 투자자 “투명·공정한 시장 원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주주 권의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시스

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안처럼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는 물론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업보다 기업 자체의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

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 반도체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선임위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만 낸

다”며 상법 개정의 한계도 지적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주주 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는 장기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주주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인 박광현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주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액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 없이는 투자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매파적 금리인하’에 한은, 고심 깊어진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내려 내년엔 4차례→2차례 인하 전망 환율 1450원 돌파… 주식도 급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매파적 금리인하’(통화 긴축 선호)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을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하 소식으로 우리나라 주식과 원화값은 크게 떨어졌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6.4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달러당 1451.90에 마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18일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AP/뉴스시스

다. 장 초반에는 1453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일보다 13.21포인트(1.89%)나 하락해 684.36에 장을 끝

냈다.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만 4300억원 어치나 팔았고, 기관 순매도는 5000억원이 넘었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금융·외환 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그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연세·나유리·안승진 기자 kys@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협치 절실한 상황… 마음 무겁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권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권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



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조실장 “재의요구 법안, 국회와 심사 숙고” /사진 뉴스시스
▲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선출… “정권교체 예언”

▲ 정부, ‘거부권=탄핵사유’ 야당 주장에 “어느 헌법 규정 따른 판단인가”
▲ 국방부 “군내 ‘사조직’ 있을 수 없고 지도도 않아”



▲ 산업장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에 “상당히 곤혹” /사진 뉴스시스
▲ 여 “야, 아무리 ‘내란’ 외쳐도 범죄 옹호당 이미지 희석 안 돼”